



나와 조직을 지키는 힘, 청렴

2014. 9. 25.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배진훈
02-2710-2025, oorungi@msip.go.kr

목차

I. 청렴과 부패

II. 청렴정책의 타겟(Target)

III. 공직자 행동강령

IV. 반부패 · 청렴 추진시책

IV. 맺음말

I . 청렴과 부패

청렴(清廉)과 부패(腐敗)

청렴(적극적 의미)

- ▶ 반부패 :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 ▶ 투명성 :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공개하는 것
- ▶ 책임성 :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부패(소극적 의미)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 위반



부패란 무엇인가?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법령위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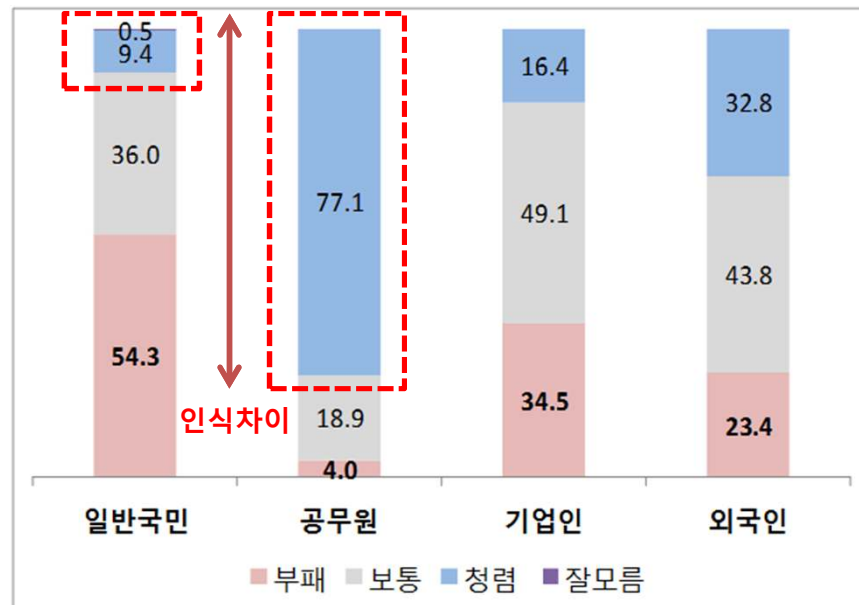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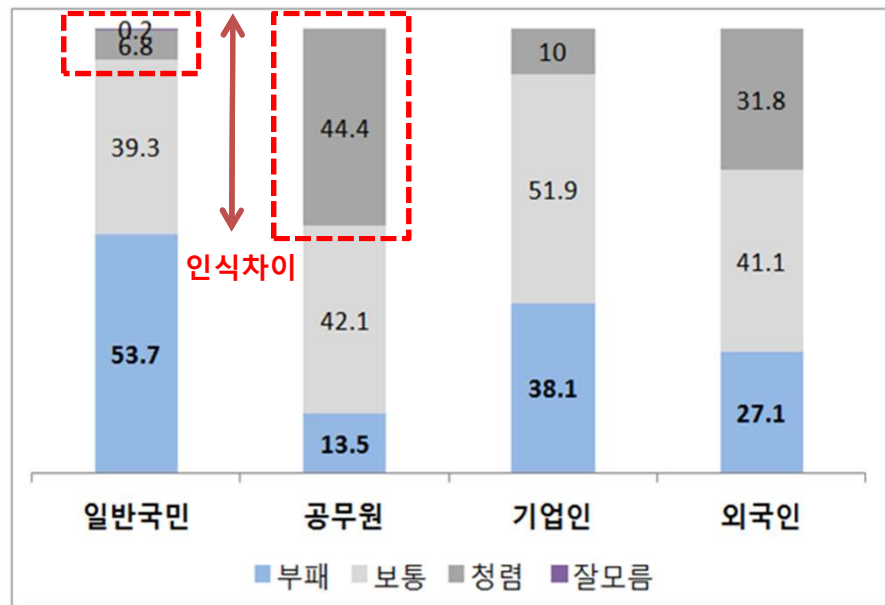
가, 나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013년도 국민의 부패인식도 조사(권익위)

〈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



〈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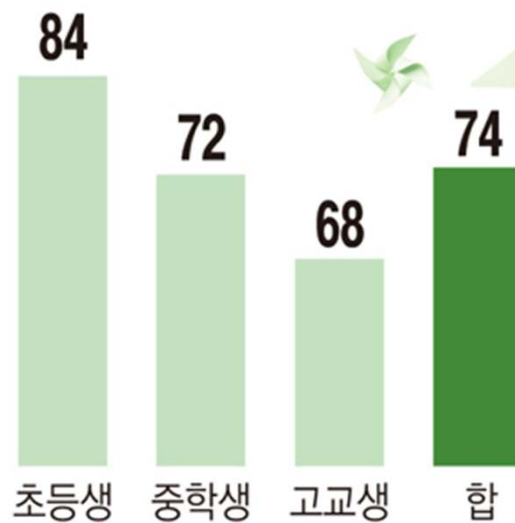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3.5배)

2013년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홍사단)

2013년 청소년 정직지수

(단위: 점, 100점 만점 기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초등 19% < 중등 27% < 고등 36%)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내도 괜찮다.**
(초등 30% < 중등 69% < 고등 78%)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다.**
(초등 20% < 중등 58% < 고등 79%)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2011년 징계 공무원

2,653 명



행동강령 위반실적 분석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분석

- '12년도 행정기관의 행동강령 위반자수(1,836명)는 '11년보다 21.9% 증가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자 크게 증가 ('11년 대비 64.3% ↑)
 - '금품 등 수수' 위반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기 관	6,631	764	1,089	1,436	1,506	1,836
금 품 등 수 수	2,776	283	381	760	651	701
예산의 목적외 사용	2,693	346	464	424	552	907
알 선, 청 탁, 이 권 개 입	279	17	70	63	80	49
공 용 물 사 적 사 용	264	21	60	49	79	55
외 부 강 의 신 고 의 무 위 반	269	72	65	50	52	30
금 전 차 용 금 지 위 반	90	6	30	21	15	18
공 정 한 직 무 수 행 저 해	45	3	8	9	17	8
경 조 사 통 지, 경 조 금 품	38	5	2	9	4	18
기 타	177	11	9	51	56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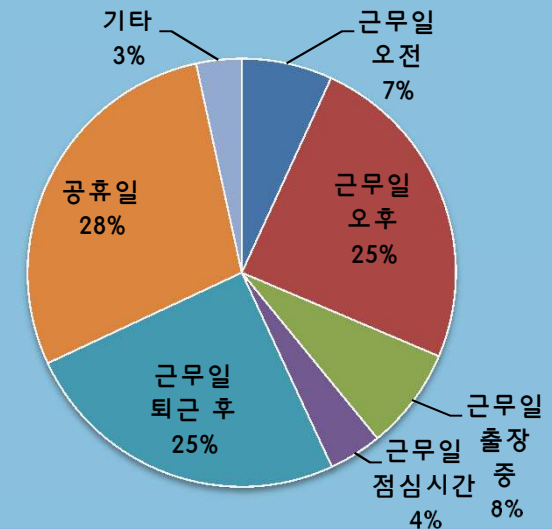
(2012년 위반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실적 분석

금품·향응 수수 위반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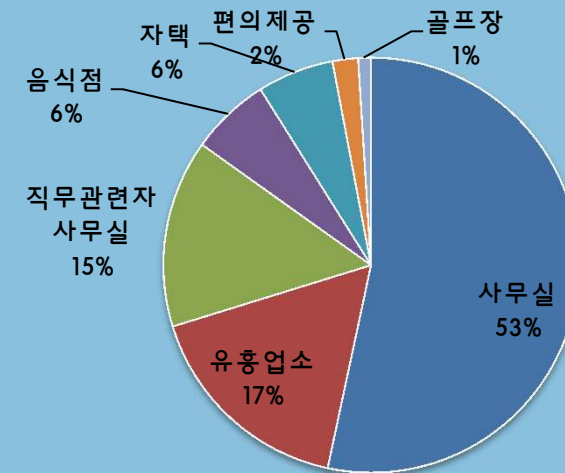
○ 발생시간

- 공휴일 (28.5%)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고,
- 근무 일에는 퇴근 후 (25.0%), 오후시간 (24.5%)에 많이 발생



○ 발생장소

- 사무실(인근 주차장 포함)(53.5%)
- 유흥업소, 골프장(16.9%)
- 직무관련자 사무실(14.6%) 등 순으로 발생



한국은 선진국 ? - 국가 부패인식지수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9위			
	43위		
		45위	
			46위

OECD 국가 2013년 CPI 현황

순위	OECD 순위	국가/영토	2012CPI
1	1	덴마크	91
1	1	뉴질랜드	91
3	3	핀란드	89
3	3	스웨덴	89
5	5	노르웨이	86
18	15	일본	74
46	27	대한민국	55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부패높음						매우깨끗함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순위	국가	CPI점수			
1	덴마크	91	19	우르과이	73	36	타이완	61																					
1	뉴질랜드	91	19	미국	73	38	브루나이	60																					
3	핀란드	89	21	아일랜드	72	38	폴란드	60																					
3	스웨덴	89	22	바하마	71	40	스페인	59																					
5	노르웨이	86	22	칠레	71	41	카보베르데	58																					
5	싱가포르	86	22	프랑스	71	41	도미니카공화국	58																					
7	스위스	85	22	세인트 루시아	71	43	리투아니아	57																					
8	네덜란드	83	26	오스트리아	69	43	슬로베니아	57																					
9	오스트레일리아	81	26	아랍에미리트	69	45	말타	56																					
9	캐나다	81	28	에스토니아	68	46	한국	55																					
11	룩셈부르크	80	28	카타르	68	47	헝가리	54																					
12	독일	78	30	보츠와나	64	47	세이셸	54																					
12	아이슬랜드	78	31	부탄	63	49	코스타리카	53																					
14	영국	76	31	키프로스	63	49	라트비아	53																					
15	비베이도스	75	33	포르투갈	62																								
15	벨기에	75	33	푸에르토리코	62	175	북한	8																					
15	홍콩	75	3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62																								
18	일본	74	36	이스라엘	61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뉴스is 그래픽 : 윤정아 기자 (yoonja@newsis.com)

NEWSis ()

외신이 바라본 한국사회

“ 빠른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부패 문제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The Washington Post (11.6.)

“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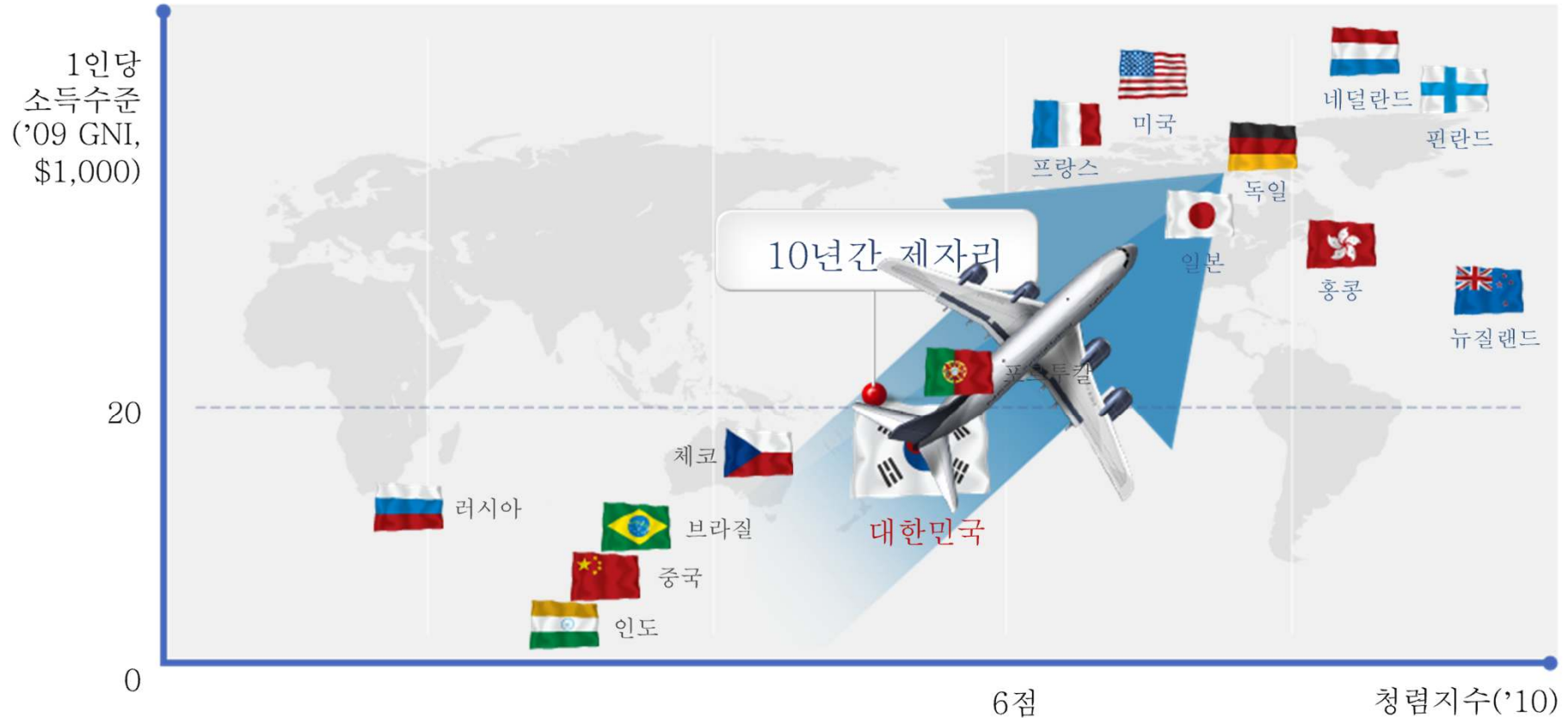
“ 부패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Financial Times (11.6)



우리의 모습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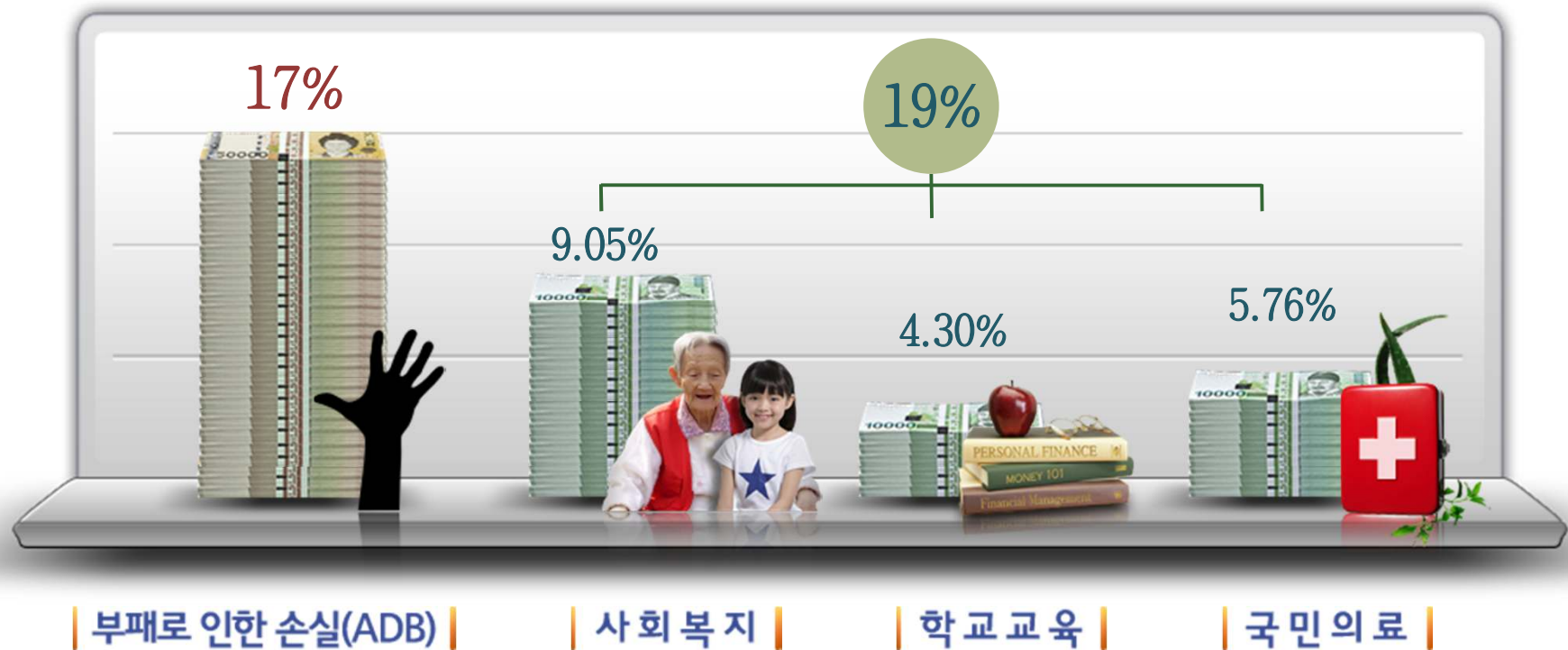


**국가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교역 31%.
외국인투자 관심도 26%, 1인당 GNP 25% 상승**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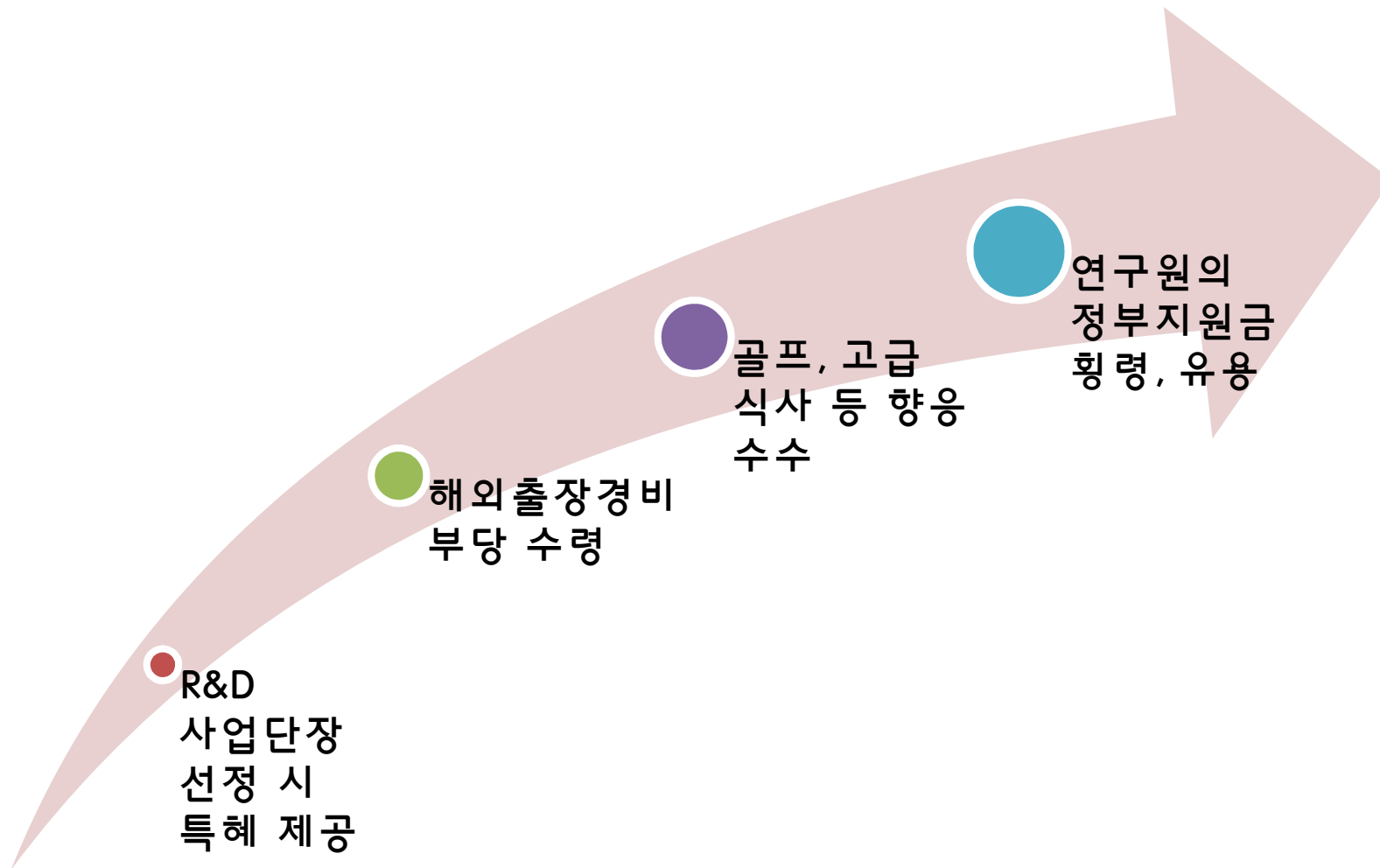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 추산 부패로 인한 손실



전체 GDP 중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예산은 약 19%를 차지
반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약 17%에 달함



최근 부패 관련 언론보도 및 지적사항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원칙으로 청렴 의지 표명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2013.2.25. 취임사)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2014.1.1, 대통령 신년사)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변화의 길에서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2014.2.10. 수석비서관 회의)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2014.7.22., 국무회의)

II . 청렴정책의 타겟

청렴의 구성 요소



[James Rest 의 도덕의 4 구성 요소 에서 응용]

청렴의 구성 요소

Sensitivity 청렴민감성

내가 이 부패 행위를 하면

-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이해관계자(제3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청렴의 구성 요소

Judgement **도덕적 판단력**

- 극단적이고 교조적인 이념이나 신앙은 판단력을 저하 시킴
-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윤리적 상황에 대한 토론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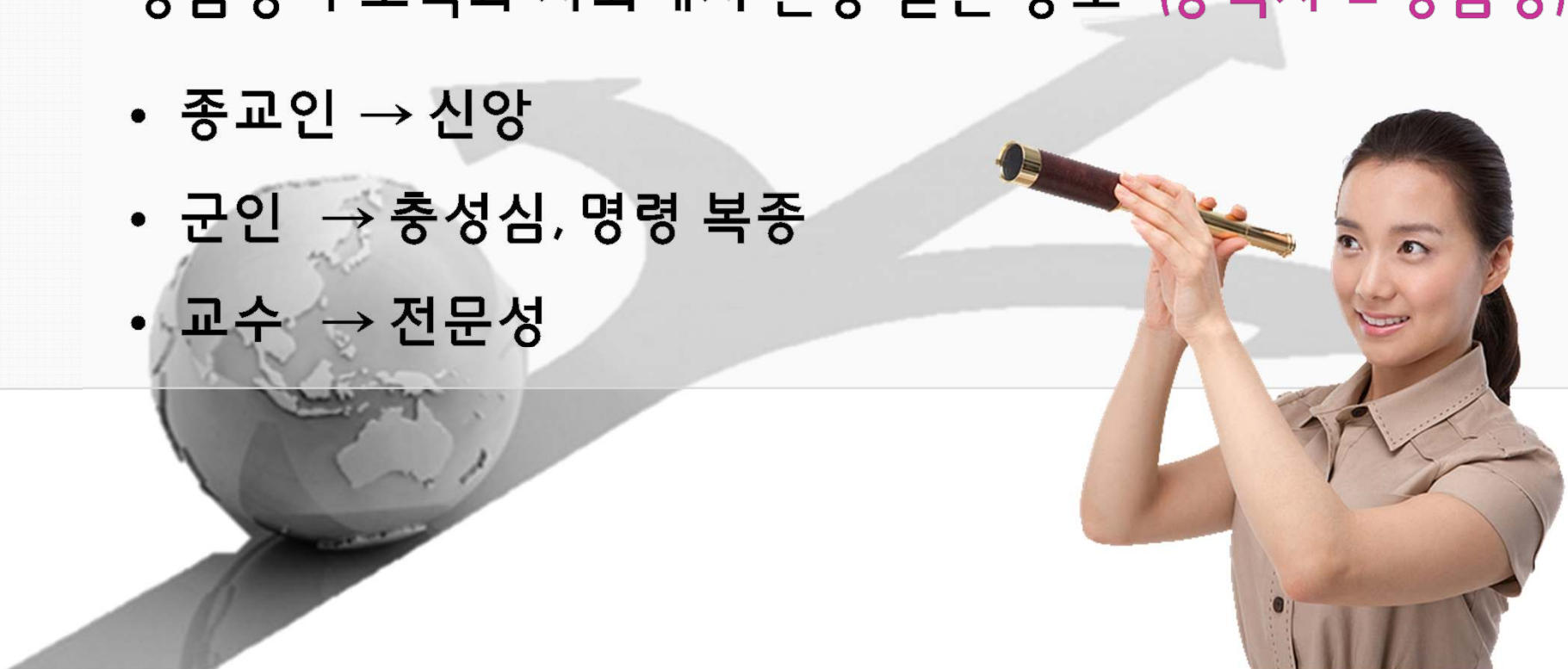
청렴의 구성 요소

Motivation 청렴 동기화

공직자에게 청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

청렴성이 조직과 사회에서 존중 받는 풍토 (공직자 = 청렴성)

- 종교인 → 신앙
- 군인 → 충성심, 명령 복종
- 교수 → 전문성



청렴의 구성 요소

Character **청렴 수행력**

청렴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청렴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 권위에 눌려서
- 탐욕에 굴복
- 집중력 저하
-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청렴의 구성 요소

반부패 청렴 정책과 4 구성요소

청렴 민감성

- ✓적발 처벌의 실효성 강화
-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
- ✓실효적인 행동강령 이행점검

도덕적 판단력

- ✓행동강령의 지속적 개선과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 ✓행동강령 상담제도의 실효성 강화
- ✓윤리적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토론

청렴 동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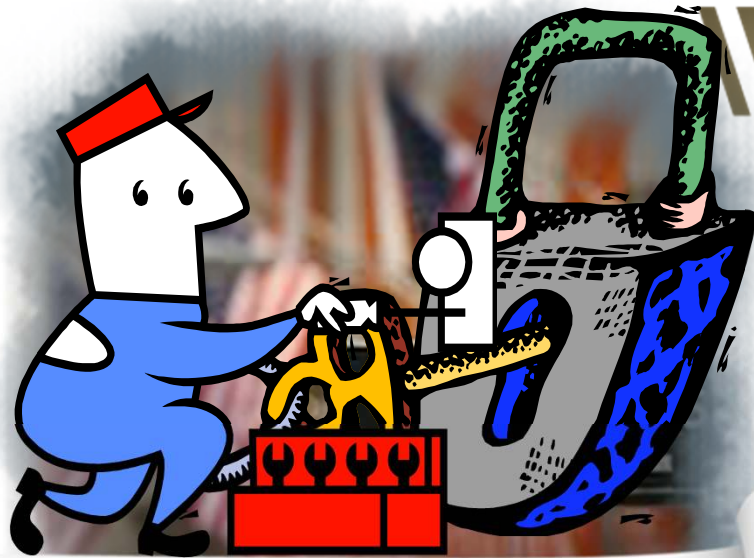
- ✓인사기준에 청렴성 포함으로 청렴성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
- ✓고위공직자 임명시 인사검증의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효과적 운영

청렴 수행력

- ✓내부고발자의 보호 강화
- ✓내부 이의제기 문화의 정착 (조직적 수행력)
- ✓실천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개인적 수행력)

청렴정책의 타겟(Target)

조건이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 : FUDGE(슬쩍슬쩍하는 경향)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

자물쇠를 열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2010년 기준, 한국인 범죄율 3.6%(경찰청)

대체로 정직한 사람 ⇨ 청렴대책 Target

자물쇠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의 **침입**을 막는 장치

“ 사람들은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이득을 얻는 동시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함 ”

Ⅲ.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의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쉽게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6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7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불복종 가능
- ▶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 공용물과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이용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이용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인사청탁 등 금지

- ▶ 자신 혹은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및 개입 금지
- ▶ 예외-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고충 및 상담은 가능

알선·청탁 등 금지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 금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제공 등 수수 금지
- ▶ 예외 - 통상적 관례 범위(3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편의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홍보용 물품



행동강령 위반사례 ①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 모 공직유관단체 B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 서무담당 C행정원은 내부규정에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 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처리' 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함.
-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담당자에게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직원은 마지못해 ○○문구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음

행동강령 위반사례 ②



용역사업 수행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 모 시청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A국장은
- 최근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땅이 건축물 신축허가 건으로 회부됐으니 형님이 편의를 잘 봐 달라' 는 부탁 전화를 받음
- 이에 A국장은 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이 센 편인 타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잘 봐달라며 사전에 연락을 취해
- 동생이 신청한 건축물의 신축허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다른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도록 처리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③



처 · 동생 운영업체 수의계약 특혜 제공

-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회계과 경리담당 A는
- 예산으로 구입하는 공공기관 배치용 집기류 및 가구 등을 자신의 처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총 5회 금 5천4백여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
- A공무원은 이해관계 직무와 관련하여 직근상급자 내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계약 과정에 참여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④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팀 소속 공무원 A는
- 인쇄물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인쇄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소속기관 감사팀장 B는 같은 고향출신으로 잘 알고 지내던 출판업자 C가 인쇄물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게 A에게 금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부당한 청탁을 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구입 물품 불법 처리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광역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소속 피감독기관인 공직유관단체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 피감독기관 직원 B와 함께 미국 Florida주로 공무출장을 떠나, 업무상 현지에서 LCD TV와 DVD 플레이어(미화 \$1450, 한화 200만원 상당)를 구입함
- 행사를 마친 A는 B에게 구입 물품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 당시 California주 LA시에 거주하던 자신의 처제에게 미화 \$50에 이전한다는 허위 매매 계약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⑥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수수

- 모 공직유관단체 A선임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업무를 추진하면서,
-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해외 패션쇼 참석을 위한 초청장 및 여행경비 부담을 요구하고,
- 마치 행사 주최 측이 직접 초청 및 경비를 부담해준 것처럼 허위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아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 원을 수수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⑦



산하단체로부터의 관행적 표창 및 금품 수수

- 甲협회와 乙협회에서는 매년 관행적으로 관내 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옴
- 이 과정에서 甲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금 열쇠고리(3돈, 시가 60만 원상당)를 부상으로 제공하였고,
- 乙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부별로 고급 LCD TV를 부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거부감 없이 수수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⑧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미신고



- 모 중앙행정기관 A본부장은
-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 회당 60만 원~90만 원까지 모두 510만 원의 강의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⑨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자 수준의 금리 연 8%로 금 5천만 원을 차용하고
-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함.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 모 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 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함

행동강령 위반사례 ⑪

직무관련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초과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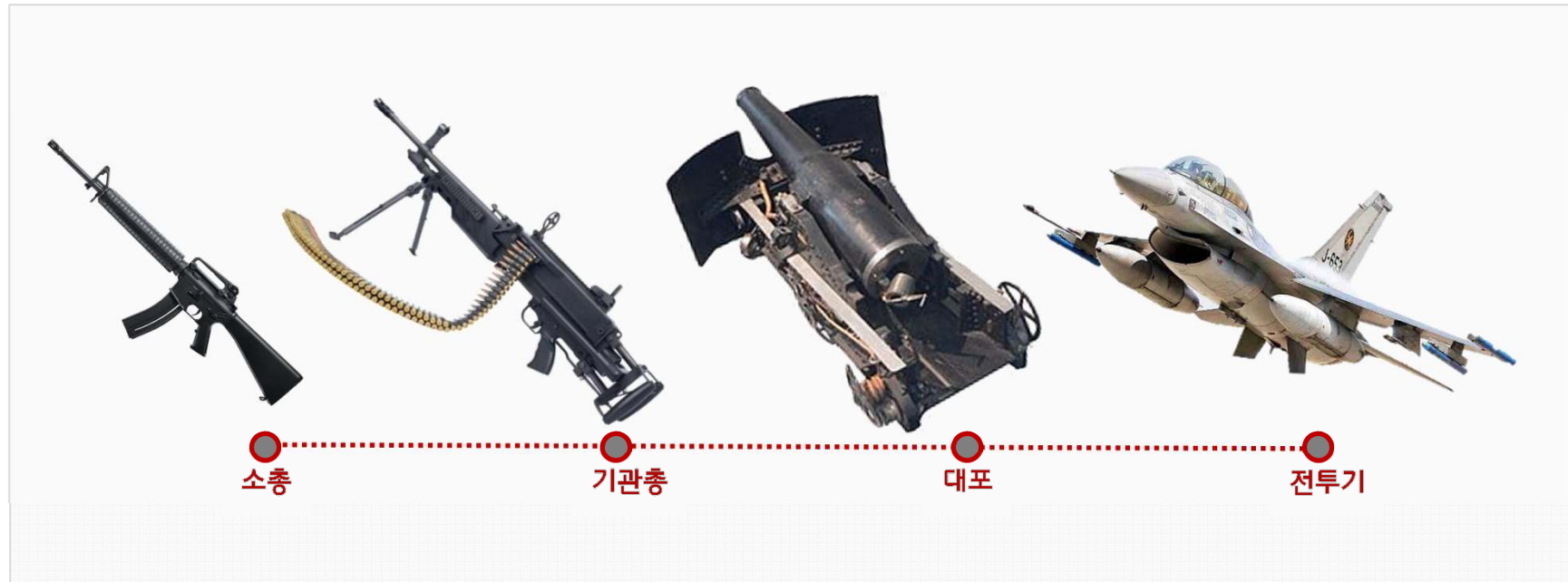


-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A는 자신의 장녀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교육청, 국립대학교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고,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8건, 80만 원을 수수함
- 모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장B는 장녀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감정평가사 2명으로부터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수수하는 등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91건, 540만 원을 수수함

IV. 반부패 · 청렴 추진시책

청렴한 조직 만들기

1. 누구나 안전수칙(행동강령)을 준수하라



권한이 커질 수록 강한 안전수칙이 필요

청렴한 조직 만들기

2. 아무리 작은 깨진 유리창도 방치하지 말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

청렴한 조직 만들기

3. 처음부터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부패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정부에 들어오게 한 다음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아니면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여
정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더 쉬운가?'

청렴한 조직 만들기

4. 아랫물도 윗물을 맑게 할 수 있다

1 내편을 만들어라

평소 주변 동료, 상사와의 신뢰 쌓아두기

2 진심으로 조언하라

부패로 상대방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언

3 3명이 함께 움직여라

3명이 함께 움직이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음



청림도 1등의 비밀



14년도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추진과제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1-2.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패 처벌 강화
	1-3.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1.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2-2. 행정절차 상시모니터링 강화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 및 법령 개선과제 이행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3-3.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4.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4-1.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
	4-2. 청렴교육 활성화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청렴 추진체계 구축



※ **자발적 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 청렴유지에 기여하거나 부패·공익신고 등 공적이 우수한 기관(부서), 직원은 연말 장관 표창, 해외 연수 및 인사 상 우대 실시
- 청렴전담팀(담당자)에 대한 해외 연수(또는 인사, 성과급) 우대

자체 감사 활성화 및 부패 처벌 강화

◆ 부내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부서의 참여 확대

- 예산집행심의위(감사관)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 정보화심의위(감사담당관) 등에 참여하여 적정성·공정성 등 사전검토
- 정책집행, 계약업무 및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 부패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실시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등
-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철저히 준수*
- *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 경중과 과실여부 등에 따라 고발 조치

미래부 부패방지시책 평가

평가대상 선정

- 권익위 직접평가를 받지 않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중
① 공공성, ② 청렴도 수준, ③ 부패발생, ④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13년 주요 감사, 국회·언론 등에서 부패행위가 지적된 기타 법인·단체는 포함

준정부기관(2개)	기타 공공기관(9개)	기타 법인·단체(3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 대상기간 : '13.10.1. ~ ' 14.9.30 (1년)
- 평가 부문 및 주요 평가 내용 : 5개 부문, 12개 단위과제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미래부 1차 정량 평가 및
외부 2차 정성평가로 병행 실시
- 평가 결과 : 최우수 기관(담당자) 표창, 미흡 시 감사 대상 기관 등에 반영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원클릭 정보접근' 구현

- 대 상 :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자체감사결과, 반부패·청렴자료
- 위 치 : 미래부 홈페이지 메인(참여정보 메뉴)

자료명	공개내용		공개시기	주관부서
	'13년	'14년		
수의계약	· 기준 : 20백만원 이상 · 일자, 건명, 거래처명, 금액, 수의계약 사유(법령)	· 기준 : <u>추정가격 20백만원 이상</u> · <u>발주부서(장)</u> 추가	월 1회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	· 기준 : 장차관, 실장급, 감사관 · 집행유형 및 총액, 일자별 세부내역 및 집행액 등	· <u>공개대상에 국장급, 부서</u> 추가 · <u>집행대상자, 사용처</u> 추가	월 1회	운영지원과 (장차관) 해당부서 (실·국장·부서)
자체감사결과	· 목적, 대상, 기간, 중점사항, 처분요구사항 등	· '13년과 같음	감사결과 처분 후 1개월 이내**	감사 담당관실
반부패·청렴	· 추진계획, 규정 등 일체	· <u>국내외 정책 동향</u> 추가	자료 생산 즉시	감사 담당관실

행정절차 상시모니터링 강화

◆ 미래부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구성, 운영

- 주요 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 감사요구, 자체감사 참여,
취약 분야(연구관리·계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비리 제보 등 권한 부여
- 대학, 연구소, 법조계, 시민단체 등 5명으로 구성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운영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의 사용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대규모 부정행위 사전 예방

법인카드	점검 사항
특근매식비	점심시간(11~14시) 및 심야시간(23시 이후) 사용내역 등
국내여비	숙박비 및 운임 이외 사용내역 등
업무추진비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주말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내역 등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 미래부 청렴주의보 실시

-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전자공문, 내부포탈, SMS 및 청렴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전 직원에게 주의
- 청렴주의보 발령시,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재전파 실시

◆ 워크숍·행사 등의 사전 신고 추진

- 행사 계획 시 성공적인 행사 개최 등을 사유로 일정, 장소, 식사 및 기념품 등 선정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사전 예방

※ 업무회의를 관광지에서 1박 2일로 계획하면서 2일차에는 자율 관광 등 불필요한 일정 실시

- 신고대상 : 미래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행사

고위직 청렴도 측정 실시

- ◆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 (전체비리의 17.4%, '12 ~ '13년)
-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속한 **조직 환경 및 업무 환경**의 부패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분석 필요

진단 분야	진단 항목	평가단
조직 환경 부패 위험도	조직 개방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하위
업무 환경 부패 위험도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등 5개	하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및 징계, 재산신고, 청렴 교육 이수 등 3개 감점지표*	상위, 동료, 하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당하지 못한 재산 형성, 원정출산 등 국적관련 사항, 병역의무, 위장 전입, 개인 사생활 등	본인

청렴교육 활성화

◆ 실국장, 과장급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강사 초청 교육 또는 청렴연수원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활용

◆ 전직원 직장, 사이버 및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율은 부내 성과평가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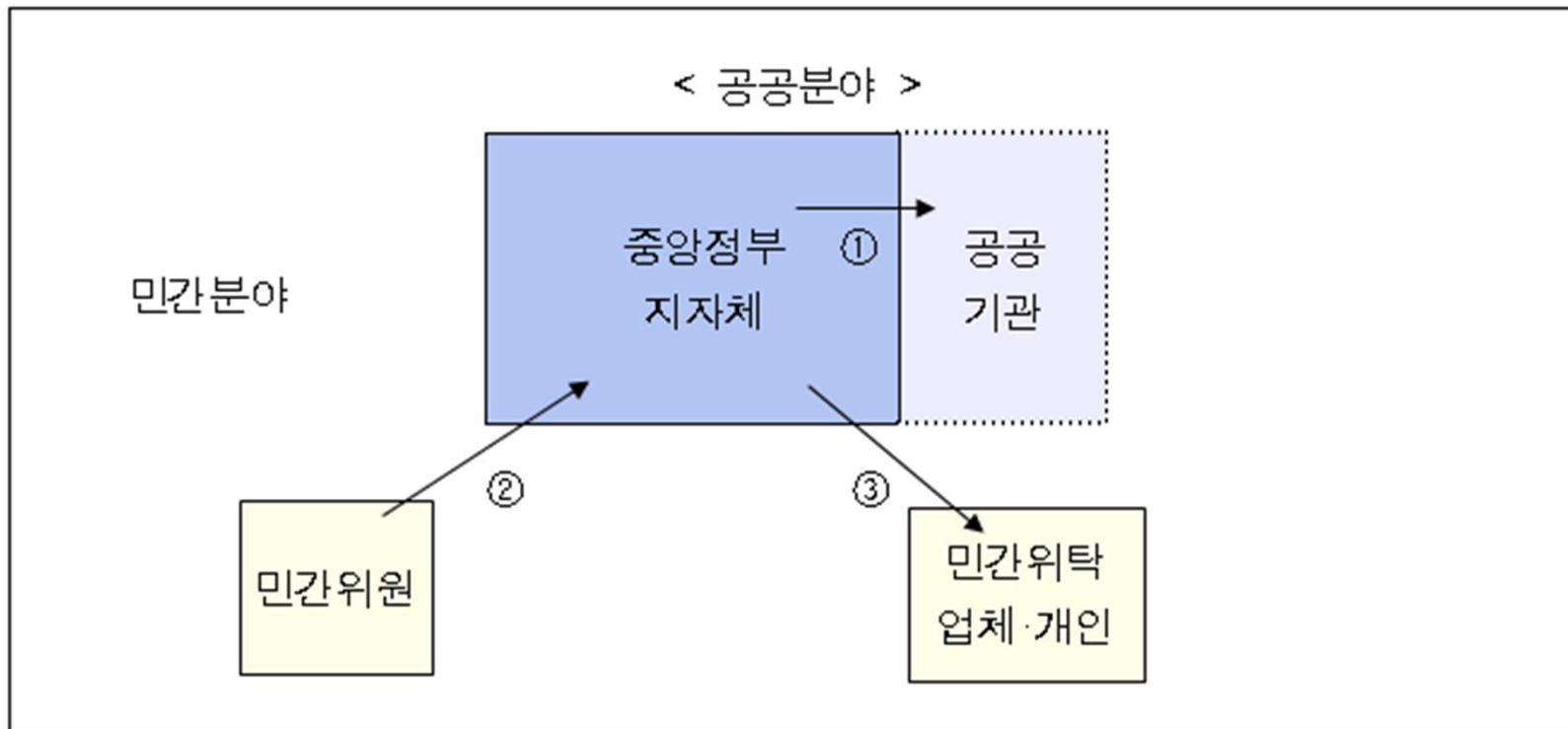
◆ 내부 청렴강사 지정 및 활동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4시간) 실시

-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는 별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 징구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높은 청렴도 요구

< 공공업무수행자의 다변화 >



행정 수요의 폭증, 효율성 · 전문성 확보 요청 등으로
민간인의 공무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높은 청렴도 요구

▶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 처벌 제도개선 추진(권익위, 13.11월)

구분	주요 내용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 업무의 공공성, 수탁업무의 성질,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둠
민간위탁	민간위탁업무의 객관성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과기정출연법 시행령 개정 (미래부, 14.6월)

개정방향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기존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

▶ 미래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미래부, 14년 중)

개정방향 : 미래부(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등
민간인에 대해서 행동강령 적용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14.8월 신설'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환부제거

- 5대 핵심분야* 부정비리 척결
- 연말까지 1단계로 부정비리 집중 척결
- 집중 척결활동 결과분석 및 부패원인 근절

발병억제

- 무관용 원칙 확립
- 행정 투명성 획기적 제고
- 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의식개혁

-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 반부패운동 민간 확산
- 부패 고발 신고 활성화

* 폐쇄적 직역 비리: (R&D) 대형 국가 R&D 연구비 유용행위, 특정 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V. 맺음말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부패는 반드시 적발된다!!

1 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2 Whistleblower

내부 비리 제보 직원은 국민권익위에서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



3 Social Media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는 내/외부적 의사소통의 활성화로 이어져 부패의 적발 가능성을 상승시킴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조직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